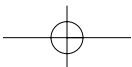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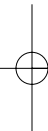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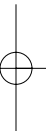


제3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제 1 장

주요 인권 현안

1. 국가보안법 개폐

국가보안법은 그 운용과정에서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 NGO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개폐 권고를 받은 사안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총 1045명(2002.12.31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 수도 현재 2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총련’ 활동 관련 구속자의 경우, 평균 형량이 1~2개월 정도로 무리한 법집행에 따른 ‘학생전과자’ 양산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것이 그 운용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안(2000.11.27)과 개정안(2001.4.27)이 각각 계류중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체 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유지론 입장에서는 ‘국가안보’ 상 북한은 여전히 ‘주적’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인 북한의 신형법, 노동당규약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면 개정론 및 폐지론의 입장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구실로 법을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적단체 구성 관련 조항(제3조)과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제7조) 등이 주요 문제점(구속자의 92%가 7조 위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주적’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반통일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이 아닌 행정기관(통일부)의 북한 접촉 허가 여부에 따라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배치된다고 비판한다.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따라서 이처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재검토, 나아가 국회 차원의 법률 개폐 논의의 활성화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3년 중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 보호감호제도 개선

보호감호제도 개선 문제는 오랫동안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중 처벌’ 및 인권탄압 소지를 문제시하며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한 부분이다. 특히, 열악한 구금 시설환경, 행형법에 의한 수용자 관리, 낙후된 교육 프로그램, 근로보상금 부족, 엄격한 가출소 기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여전히 높아 ‘재사회화 교정기관’으로서의 본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감호처분은 그 형식과 내용, 효과 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보호감호 처분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형과 동시에 선고(1년마다 가출소 심사가 있으며, 7년을 초과할 수 없음)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형벌처럼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에서, 가출소 여부 결정주체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 ‘사회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 제도 개선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회보호법」을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3년 중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수용 여부 등이 쟁점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7조 등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4년 ILO의 고용정책 권고(The Employment Policy n°169)에서도 각 회원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정규 부문에 흡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고 사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고, 4대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비정규직 확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청원(2000.12) 중이며, 정치권을 비롯하여 새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차별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인데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사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인 5대 차별(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정책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2003년 중점과제로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권위원,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올해 안에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차별금지기본법에 담을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개념규정, 차별 시정 국가실행계획(NAP) 수립 및 시행 장치, 차별금지의 기본시책 마련, 고용 · 교육 · 재화 · 시설 · 서비스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차별 금지 및 잠정적 우대조치, 그리고 가정 · 학교 · 직장 · 사회 각 부문에서의 차별금지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는 물론 사적인 부문에서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이외에도 강력하게 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차별시정위원회)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동시에 관련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 · 고문 등 중대한 반인권범죄나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 등이 공소시효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했던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위원회에서도 2002년 8월, 관련 분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이 입법 청원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길며, 미국은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대다수 주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인권 관련 제도의 보완 및 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관련 분야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경찰·국가정보원·검찰 등 사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형제도 개선

사형제도는 형벌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벌이며 비인도적이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관계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9년 11월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사형 규정 범죄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2년 말 현재 사형제도 폐지국은 111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하여 7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하여 1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 폐지한 나라는 22개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과 형법에 100개의 사형 규정을 두고 있고,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현재 52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중이다. 현재 국회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전면 폐지론 및 단계적 폐지론, 그리고 존치론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형제도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생명권 침해,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비인도적 제도, 야만적 형벌, 오판 가능성, 범죄 억지력에 대한 회의, 형벌의 목적과 상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단계적(부분적)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종신형 같은 대체입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강간, 살인, 간첩죄 등 중대범죄에만 국한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반면에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입장은, 범죄 억지력이 통계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에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도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견해가 크므로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11월,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95헌바1)이 나기도 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형제도 존폐 여부 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7.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현안 중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구금시설 환경 및 수용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건강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어 전국민건강보장시대에 맞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의료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취업을 꺼리고 있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용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문제는 예산부족(1인당 연 5만 9000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력의 질적·양적 공급 및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용자들에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높은 입국비용과 송출비리 빈발,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지위 보장 미비, 임금 및 노동조건 열악으로 인하여 불법체류 노동자가 양산되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1999년 4월 7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상 차별방지 조치 및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국무조정실에서 제안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우리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관련 쟁점으로는 산업연수제도 존폐 및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노동 3권 보장 범위 및 방식, 사회보장 적용 범위, 혼인, 자녀교육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양성화 조치 여부 등도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사항에 대해 새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9.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방지

개인의 유·무선 통신 등에 대한 도·감청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 의한 사생활 영역의 침해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 및 감청 의혹이 증폭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금융정보 등을 담당하는 사기업에 의한 대량 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사생활 영역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열거된 감청대상 범죄의 적절성 및 수사기관 등의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문제시되고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있으며, 사생활의 보호영역이 파괴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유엔 인권 관련 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협약에 가입하고, 가입한 주요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협약은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협약발효1991-당사국49), 「여성에대한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2000-30), 「대인지뢰금지협약」(1999-131),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1950-141), 「단결권및단체교섭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1951-152),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하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에관한협약」(1970-45) 등이다.

또한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협약으로는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2002-42), 「아동매매 · 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2002-42)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입한 주요 인권협약 중 유보한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3-1-1〉 인권협약 중 유보조항

조 약 명	유보 조항	유보 내용
경제적 ·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없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 제5항 제22조 제41조	재심받을 권리 노동조합결성 및 결사의자유 국가간 통보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없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g)	가족성 선택권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제40조제2항(b)(v)	면접교섭권 입양에 대한 관계당국허가 상급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고문방지협약	없음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제1절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인권보호를 위해 개별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단계적·계획적 개선을 위한 청사진(Master Plan)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인권신장과 함께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에서는 각국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01년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NAP 수립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로 하여금 실천가능한 NA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NAP 수립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즉, 영역별, 소관 부처별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일정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인권수준을 개선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중 유보사항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 ·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의 인권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자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파급효과가 큰 영역 별로 이정표(landmarks)를 개발하여 그와 관련된 목표 달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권정책을 개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시민단체들의 활성화 방안 등도 NAP에 반영되어야 한다.

NAP는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연구용역, 인권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NAP 기본 시안 마련이 요구된다.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분야별 전문가, 인권 사회단체 등 범국가적인 역량의 총결집이 절실하다. 또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의 성공은 시민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NAP 수립은 워크숍, 공청회,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및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이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 인권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에서 출발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천지향적(Action-oriented)인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Feedback)을 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2.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인권 현안 중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Task Force Team(이하 “TFT”)을 운영하고 있으며, TFT 운영은 각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취하면서, 관계 법령 개폐, 제도·정책 등의 개선 권고 등의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TFT에서 논의할 과제선정은 위원회의 그 동안 운영 경험 및 시민사회의 개선 권고가 있어 온 주요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과제가 설정되면, 과제별로 팀장(상임위원), 팀원(비상임위원포함), 법조계, 학계 및 관련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 3~4인, 실무간사, 행정비서 등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게 된다.

TFT 운영방식은 과제별로 6~10개월의 기간을 확보하여 필요시 연구용역, 공청회 또는 청문회, 워크숍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 및 사례 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논의되며 필요시 관련 분야 및 쟁점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된다.

많은 인권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력 및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2003년 위원회 TFT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국가보안법 개폐, 보호감호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 등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다. 인력과 예산이 보강 되는 대로 2004년에는 과제수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수립

인권보호·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를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법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및 개선방향은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확대에 따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권교육의 법제화 및 인권교육의 통일성, 종합성, 체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2004,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은 각국에 이 계획에 따른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요구측정과 전략 수립의 측면에서 모든 국가의 인권교육 책임기관은 상세한 인권교육 이행계획 개발을 요청받게 된다. 인권교육 발전 종합 프로젝트는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으로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국제 행동계획의 원칙과 목표를 반영한 종합적 이행계획이 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 발전 종합 프로젝트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교육 현안 공론화 및 정책 수립, 관련 국가기관 · 자치단체 · 시민사회 · 전문가 개인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행조건의 확보 등 인권교육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인권교육 확산에 따른 인적 · 물적 기반 강화는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과정이고 결국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인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이보다는 단일법으로 「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법제화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기관협조, 인권교육의 상설화, 각급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및 이에 부수한 사항, 민간 인권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인권교육원 설립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결국은 국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인권교육원의 설립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인적기반 및 물적기반 개발을 체계화하고, 인권교육의 통일성을 기하여 종합적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부 및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인권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를 인권적으로 변모시킨다. 이러한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하고 기본토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자 참여정부 주요정책의 하나인 차별시정은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권 감수성이 제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일상 속의 차별의식을 지적하고,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이른바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2002년에 개발한 인권만화와 인권영화에 이어, 2003년에는 애니메이션, 사진, 포스터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차별 예방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차별문제 중에서 공감대가 높고 실생활에서 우선해서 개선되어야 할 주제(외모, 나이 차별 등)를 선정하여 집중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차별의식을 일깨우고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이 필요하므로 각종 전시회,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고자 한다.

언론은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 효과적인 통로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파급력이 큰 언론이 인권을 주요한 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언론사와 공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동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익광고, 언론인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안내서 발간, 인권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즈음하여 각 나라는 인권옹호와 존중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일(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데는 부족했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반성장치’라는 유엔의 지적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인권의 날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토대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인권선언기념일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아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지킴이상 제정, 인권전시회 및 인권영상전 등을 개최하여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 진정사건 조사 · 구제의 실효성 확보

현행 위원회법 제36조는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 요구 후에 제한적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원인이 되는 사실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시급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조사업무에 있어 위원회법 제56조의 인권옹호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외에 기존의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각종

강제처분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관들이 조사와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접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제도, 강제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제도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법은 조사 대상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하거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은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가 곤란하다.

인권침해 진정 처리사건 1360건 중에서 각하 처리된 진정사건이 1170건으로 처리건수의 86.0%를 차지하고 있다. 각하 처리된 진정사건의 각하사유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34.4%),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 원인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23.9%),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7.3%),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13.2%) 등은 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각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그 조직과 관련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기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취약성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2. 지방사무소 설치

지방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주민들의 위원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사무소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행위 등도 있어 지역의 인권단체나 언론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인권보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장을 위하여도 지방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대상 기관인 검찰, 경찰,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어 조사의 신속성 확보와 진정인에 대한 면전진정 접수 및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방출장 등에 따른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곳에 지방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표 3-1-2〉 인권침해 관련 주요 조사 대상기관

(단위:개소)

검 찰			경 찰		구금·보호시설		군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경찰서	파출소	교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5	13	41	231	2,930	44	936	98

3. 국가기관간 협의체 구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0조). 또한,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제29조).

그러나 국가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없어 정부 부처와 인권 관련 업무의 조정과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가 차질을 겪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령개정을 통

하여 범국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주요 인권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 인권정책관들이 참여하는 국가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구에 의한 기본권 침해 내지, 기본권보호의 실패라는 배경에서 태동되어 그 주된 업무를 ‘국가기구로부터의 인권 보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여타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원칙들을 명시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한 장을 할애, ‘독립성’ 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임을 천명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사·예산상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는 위원회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법 제정까지 3년여 동안 주된 관심 사항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위원회법은 제3조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제정된 위원회법이 보장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은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독립성’의 수준과도, 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과도 거리가 있어 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02년 11월 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국외출장 사전보고와 관련한 ‘독립성’ 논쟁은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 1년 이상의 시행과정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다양한 영역의 인재 확보가 어렵다. 위원회 업무 특성상 의료·법률·교육·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행정자치부 등이 조직 및 직원채용과정에 관여하는 기존 국가공무원 기용방식으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 둘째, 행정부처 예산확보 방식으로는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 위원회는 전술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한 바와 같이 직무상 특별히 독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예산요구액 감액시 의견 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인사와 예산의 예측은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업무의 실질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예산에서 독립성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 즉 첫째 사무처의 조직과 분장사무, 직원의 정원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장에게 전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며, 셋째 세출예산요구액 삭감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하고, 넷째 자체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여 완전한 기능상 독립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설립과 권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1. 인권 관련 법령검토 및 개선 권고

공·사부문의 조직 및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내 법령은 현재 3000여 개가 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법규, 기타 각급 기관의 지침, 훈령, 예규 등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의 실행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왜곡된 관행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법제 및 관행 등에 의해 국민의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재해 있다.

과거 국내 정치 및 인권 상황에 견주어 볼 때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국내 법제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제·개정 및 그 실행은 여전히 효율성과 합법성을 위주로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제기된 진정사안, 국가기관의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재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 인권 현안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인권증진 방안의 기반으로 국내 인권법령의 체계적이며 종합적 정비작업이 요구된다. 법령 및 제도는 그 광범위함과 파급효과 등에서 볼 때,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사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위원회가 인권업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법령 제·개정 등 개별사안 및 진정사건 등에 있어 법제와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령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종합조사는 차별적 요소, 사회권, 자유권 등 주요 영역을 기준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 영역을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러한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인권 관련 법령 정비는 대상 법령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령과의 비교 법적 연구 등을 통한 일차적 접근과 해당 법령의 주무 부처와의 실무적 협의절차를 통하여 개선의 권고, 의견제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법령 정비 작업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모임, 토론회,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령 개선의 적합성과 합의도출에 노력할 것이다.

2.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법령 정비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 인권보호에 있어 국제적 흐름과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수준에 맞는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당사국에 직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권 관련 법령의 정비는 국제적 기준이 그 주된 준거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가입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제의 미비점에 대하여 미가입 조약의 가입촉구, 관련 이행법안 검토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국내 법령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연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의 그간 국내 이행조치 등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에 있어 문제 제기와 권고를 표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인권법령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우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의 부문에서 정비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권보호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인권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공·사 부문 전반의 총력적인 노력은 관련 기관, 개인들에 있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국가기관 등의 자체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며,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협의제도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비 노력과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 구금시설, 장애인, 군대 등 총 11개 분야 29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4개 인권 시민단체와 20개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활동가가 참여하여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업무로 협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태조사 사업은 비록 위원회 출범과 함께 부족한 인력과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2003년 실태조사 사업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실태조사 사업은 2002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추진위원회는 2003년 실태조사 과제선정 원칙으로 사업의 연속성, 인권 현안, 기반구축, 인권위 필수업무 4개 원칙을 선정하였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인권시민단체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어 2003년 실태조사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였고, 인권시민단체로부터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2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을 충분히 담아 내야 한다.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 실태조사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위원회에서는 각 영역별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를 찾지 못한 상태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인권 영역별로 기존의 논의와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권위가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분야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활동해 왔던 인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론과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인권 시민단체가 함께하지 않는 실태조사는 문제에 피상적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다.

셋째,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은 여전히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이들이다. 구금시설, 군대, 다수인 보호시설 등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관련 국가기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인권실태의 문제를 감추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 첫 단계가 정확한 인권 실태조사이다.

넷째, 관련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인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 영역의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다. 인권 실태조사는 시민사회 영역의 현장성과 전문가나 학자의 이론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인권문제에 전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권분야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실태조사도 발전할 수 있다. 인권 연구기반 확충과 실태조사 사업에의 교류 협력 확대는 목적이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므로 두 사안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 방안

1. 직원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에도 조사권의 제약요인이 있고, 또한 과거 선례가 없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권지킴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직원 스스로 한 차원 높은 전문지식, 축적된 경험 및 치열한 인권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세계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다양한 실무교육 및 사례연구, 그리고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전

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2. 업무량 폭주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

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진정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누적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도 과도한 형편이다.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3593건으로 이중 인권침해 사건이 2833건, 차별행위 사건이 189건, 기타 571건 등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사회보호제도 개선 검토, 비정규직 차별 해소대책 등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연구하여 개선안을 마련, 권고하여야 하는 업무도 산적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지연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사무처 직제 제정시 합의하여 이미 확보하였던 예산마저 불용처리하게 된 전문계약직 15명, 공무원 파견 20명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초 직제령 제정시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무처 인력 규모 321명(지방사무소 인력 불포함)은 1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규모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 및 조직 보강이 절실하다.

제5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인권 관련 유엔 국제회의에서 민간단체들이 제출하는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보고서는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있다. 유엔의 각종 권고는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접지원하고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

인권단체가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 관련 사업영역에 대해 사업의 적실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체협력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사업 형태로 시행되며 또한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전공학자,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선정된 ‘단체협력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선정과 지원금액, 평가 등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실천 가능성이 높은 대중적인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시민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 5개 분야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좀더 영역을 확대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을 보급, 실행시켜 인권의식 함양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사업들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역별, 분야별 간담회 그리고 향후 민간 시민단체들과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업무

설명회]와 같은 자리들도 마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권단체 실무자와의 커뮤니티(communitiy)를 위원회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간의 정례적인 의견교류의 틀로 추진할 계획이다. 커뮤니티는 인권단체와 위원회의 실무차원의 상설적인 의견교류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논의, 진행과정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인권강사단 등 인권 전문가들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경기·강원 등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에서 한 차례씩 실시한 뒤 진행 성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을 세분화하고 교육내용을 보강해 상설적인 ‘인권 강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1)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

위원회는 2002년 11월 APF에 가입함에 따라 아·태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APF 활동에 적극 참가할 예정이다.

우선, APF 이사회에 위원장이 참가하고 12개 회원국가인권기구간 사무총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책임자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APF 법률가자문회의 위원으로 한국의 법률전문가를 선정, 파견하여 APF에서 위탁하는 지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공공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매년 개최되는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APF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며, 회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2004년에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도 주관하여 지역내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하여 회원 국가인권기구간 공동 토론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다. 또한 위원회는 2005년에 제10차 APF 연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아·태지역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직원들에 대한 국제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의 설립과정, 임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을 국제인권 교육에 적극 파견하여 인권 관련 국제적 전문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의 인권교육기관에 대한 제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들이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파견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외국의 인권기구간 직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국의 인권기구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필요시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인원을 교류하고자 한다.

(3) 유엔 등 인권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가

유엔 현장상의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어 가능한 한 전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제 인권동향 파악과 함께 주요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자 한다. 또 이 회의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내 NGO들의 활동상황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이들과 공동보조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한다.

국제인권조약에 비준한 모든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약이행감시기구가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들 정부 보고서를 심의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 조약감시기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시에는 반드시 참가하여 제반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점차 다원화, 글로벌화 함에 따라 다양한 섹터에서 국제 NGO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도 활발하게 개최됨에 따라 이들 NGO들과 상호 교류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03년부터는 국제 NGO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환경권, 건강권 등 전문화된 섹터(sector)별 회의에 대한 참가를 보다 확대하고자 한다.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 파견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국제인권기구 주재국에 상주직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거의 일년 내내 50여 개 의제(agenda) 관련 국제인권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에는 아·태지역 12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중인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 APF 사무국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인권기구 주재국, 특히 인권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우리 주재관을 상주시켜 관련 회의 참가, 각국의 국제인권규약 이행실태 및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인권상황 설명 및 홍보, 위원회의 입장 전달 창구 역할, 기타 주요 국제 인권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재관 제도를 통해 위원회는 각종 국제회의 운영절차 습득, 국제사회와의 신속·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국제 인권동향에 대한 위원회의 즉각적 대처 능력 확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상시 협력 증진을 통해 인권선도국(특히 아·태지역에서)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준국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이자 위원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적극적 차별시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 국가인권기구에도 주재관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경우, 1998년 기준 1년에 약 2900억원(우리 위원회의 15배)의 예산과 2613명(중앙 628명, 25개 지방사무소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1985명)의 직원을 가지고, 연평균 10만 6000여 건의 차별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차별’ 문제와 관련된 실무 경험은 물론 연구 역량마저도 미진한 우리나라에서 차별 조사 · 구제 관련 업무를 초기에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 주재관을 파견하여 위원회의 차별조사 · 구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5)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활성화

200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스칸디나비아 옴부즈만 및 유럽 인권재판소 등의 방문을 추진하고자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헌법 및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기구이며, 스칸디나비아 옴부즈만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한 형태로서 비슷한 형태의 유럽, 남미지역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옴부즈만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유럽 인권재판소(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소재)는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 1959년 설립되었다. 특히, 그 판결내용이 정교하고 논리 정연하여 재판소의 재판상황 및 판결문 등을 파악, 연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기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2002년에 발간한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 자료집」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최신자료를 수시로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대 국민 인권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인권기구 현황, 국제인권기구 · 단체들에 대한 제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인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반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